



방통위는 고용승계 로 FM99.9 새사업자 공모의 책임을 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경기지역 유일의 민영 라디오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지난해 3월 폐업한지 1년 7개월만이다.

그 동안 경기방송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방송권 자진 반납을 막을 수 없는 규제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경기지역민을 위한 청취권 회복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생존권을 위해 추위도 폭염도 받아들이며 거리투쟁을 했다. 동력은 오로지 FM99.9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었다.

1분 1초라도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라도 공모가 시작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을 위한 새사업자 선정이 기획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된다. 새사업자 심사항목에 고용승계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경기방송의 방송부문 평가는 142개 방송사 중 상위 10위권이었다. 경기방송 노동자들은 지역방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적도 없는 바른 언론인들이었다.

심지어 경기방송 노동자들은 조건부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의 중단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경기도민 청취권 보호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조건부 재허가의 이유로 들었다.

애초에 방통위가 제대로 재허가 심사를 했더라면, 자진폐업 같은 경영진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었다면 장기간에 걸친 경기지역의 방송공백과 경기방송 노동자들 같은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제2, 제3의 경기방송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간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 책임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라도 방통위는 고용승계가 포함된,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고 경기도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방통위는 경기방송 관련 사태의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허가조건으로 내세워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외면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새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본다. 방통위가 옥석을 가려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신속한 방송재개와 노동자를 고려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20.10.23일 국정감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는 말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2021. 10. 2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